

안건 7건 2시간만에 후다닥… 심의도 조정도 ‘수박 겉핥기’

시·군까지 뒤덮는 초고층 아파트… 기능 상실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광주일보는 전남도에 지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이를 자료를 분석했다. 최근 각 시·군이 인구 유입, 지역 발전 등을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도시계획위가 시간에 쫓기듯 허술한 심의, 안건 관련 위원들의 참여, 유도하는 듯한 회의 방식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작년 1~9월 회의록, 심의·의결 결과 분석

이해관계자들 위원 참여 조건부 의결 유도

“부결땐 혼란 초래”…시·군 눈치보기도 문제

◇시간에 쫓기는 심의안건 제대로 보나=전남도도시계획위는 위원장 포함 교수 16명, 연구소나 업체 일원 2명, 전남개발공사 1명, 한국예총 1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전 광양만경 제자구역청 본부장 1명, 전 건설교통국장 1명, 도의회 의원 2명, 공무원 5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정도 매달 회의를 개최하며,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1건 정도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안건이 3건 이상인 경우 회의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7건의 안건이 처리된 지난 해 9월27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은 “10분 밖에 안 남았다”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등의 발언으로 위원들을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제대로 계획된 것인지지를 물고 있는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위원장은 “구역 결정이 타당하다고

이 안건 역시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전남도 도시계획조례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제출 또는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시·군 눈치보는 전남도도시계획위=전남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시·군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며 “시·군에서 지나친 개발사업은 먼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전남도도시계획위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등 시·군의 제출안건을 ‘통과’ 시켜주는 기능에만 충실히다는 것이다. 전남도도시계획조례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수정 의결, 재심의 의결, 부결, 위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대부분 원안 의결과 조건부 의결이었다.

또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뒤 업체 일원이나 전자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선뜻 이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의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양태가 각기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판박이 사업이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전남도 도시계획위의 조정 기능 상실 때문”이라며 “심의 시간을 들여 전문적으로 이를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 유입 명분을 내세워 ‘개발 행정’에만 치중하면서 전남지역 중소도시, 군 지역 시가지까지 고층아파트로 뒤덮이고 있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허가 전담창구 늘리고 소극적인 공무원엔 불이익

지방규제 연내 10% 이상 줄인다

정부 개선 대책 추진

5만2500건 일괄 정비

정부가 5만2500여건에 이르는 지방규제를 올해 안에 10% 이상 줄이기로 목표를 세우고 인·허가 전담창구의 확대 설치,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 등 총 5만2541건에 이르는 규제를 일괄 정비, 올해 안에 지자체 당 10%(5200여건) 이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한다.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101개 자치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 간 학동심의를 정례화해 월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또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체와 공무원의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안된다”

국회 대정부 질문…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 질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앞세워 지방 경제를 망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일자 1면)과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우선 여야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 출신인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지

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해 놓은 것들을 완화한다면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전부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은 “MOU까지 맺으며 지방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점부정책이 바뀔까 맘설이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충청 출신인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전국 사업체의 4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각종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더 몰린다면 지방은 또다시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0주년
광신대학교
음악학과 설립 20주년 기념
교수음악회
4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062)
광신대 친미관 4층 콘서트홀 605-1130

Gwangju Golf Show
2014 광주 골프쇼

2014.4.17(목)~4.20(일)
오전 10시~오후 6시 /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품목

- 골프클럽, 시뮬레이션(스크린)골프시스템, 골프웨어, 공, 골프화, 연습기자재, 골프장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골프연습장 시공 및 설계, 골프관련 인터넷사이트, 악세서리 등 골프관련 산업 전반

부대행사

- 관람객 경품 이벤트
- 골프 바디피팅(슬피팅)
- 스크린골프 창업상담회
- 송경서 골프클럽 소속 프로 원포인트 레슨

입장료

- 일반 2000원
- 홈페이지 사전등록자, 경로자(65세 이상), 청소년(고교생 이하),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무료입장
- 사전등록 : 온라인등록시 무료입장 (홈페이지 참조)
- 등록기간 : 4월 16일(수)까지

참관객 경품

- 아이언세트, 드라이버, 우드, 유탈리티, 퍼터, 골프우산, 캐디백, 골프화, 골프공, 그 외 다양한 골프용품

주최 | EX 후원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
GOLF
광주 골프 쇼 | TEL: 02-356-4309 | FAX: 0505-356-4309
운영 사무국 | E-mail: ibo3651554@nate.com